

보도일시	2018. 11. 12.(월) 조간(온라인 11. 11. 12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18. 11. 11.(일) 09:00	담당부서	연구개발정책과 연구기관지원팀
담당과장	이석래(02-2110-2350) 한성일(02-2110-2490)	담당자	정담 사무관(02-2110-2354) 한철환 사무관(02-2110-2496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부실학회 관련 연구기관 조치내용 점검

- 21개 출연(연)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인사조치 및 징계 예정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(이하 '출연(연)')의 부실학회 참가자 「직무윤리 위반」 징계결과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※ 과기정통부는 출연(연) 및 4대 과학기술원(KAIST, GIST, DGIST, UNIST, 이하 '과기원')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(정병선)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연구윤리 점검단(이하 '점검단')' 운영 중

- 1차 점검의 대상은 과거 12년 기간 중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(연)*의 ① 직무윤리 위반, ② 연구부정, ③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·검증결과 및 후속조치이다.

* KIST, GTC, 기초지원연, 천문연, KISTI, 한의학연, 생기원, ETRI, 건설연, 철도연, 표준연, 식품연, 김치연, 지자연, 기계연, 항우연, 예기연, 화학연, 안전성연, 원자력연

- 출연(연)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하여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.

- 특히, 출연(연) 지원육성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인 출연(연)의 위상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, 출연(연) 소속 연구자의 직무윤리 위반*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유도했다.

* 부실학회 참가로 인한 기관 명예실추, 해외출장 시 사전조사 의무 소홀 등

- 11월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(99.2%)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되었으며,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(주의/경고/징계) 및 기타 행정조치(포상추천제한/해외출장제한/보직제한 등) 처분을 진행하였다.

< 출연(연) 부실학회 참가자 조치현황('18.11.9. 기준) >

참가횟수	조치기관	대상자	인사조치 수준				
			주의	경고	견책, 감봉	정직, 강등, 해임	미정
합계	-	251명	1명	217명	30명	2명	1명
1회	21개	218명	1명	214명	2명(11.9)	-	1명(11.19)
2회	12개	24명	-	3명	21명	-	-
3회	4개	6명	-	-	6명	-	-
4회	1개	1명	-	-	1명(11.8)	-	-
5회	1개	1명	-	-	-	1명(11.8)	-
7회	1개	1명	-	-	-	1명(11.14)	-

※ 각 기관별로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하여 각 1년 이상의 포상추천제한, 해외출장제한, 보직제한 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

-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'셀프조사'에 따른 '숨방망이 처벌'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출연(연)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.

- 점검단의 점검은 **조사방식의 적정성, 검증결과의 타당성,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**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각 기관에서 **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**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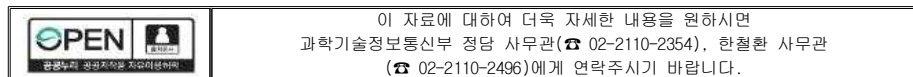
□ 앞으로 점검단은 **부실학회 관련** 출연(연)의 연구부정, 연구비 부정 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, 연구부정,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**조사·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**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**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**

- 특히, **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**를 심의하여,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**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**한다는 계획이다.

□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“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윤리 관련하여 **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**을 시행하였으며, 앞으로도 **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**”이라고 밝히며,

- “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**엄격한 조사·검증과 단호한 조치**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붙임 1. 출연(연) 부실학회 관련 조치 및 점검계획
2. 연구윤리 점검단 개요



붙임 1 **출연(연) 부실학회 관련 조치 및 점검계획**

□ **부실학회 관련 조사·검증 및 조치 유형**

부정행위 유형	주요 소명·조사 항목	위반시 조치내용
① 직무윤리 위반	• 부실학회임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참가 (통상적 용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)	기관 자체징계
② 연구부정 (연구윤리)	• 부실심사를 악용한 논문의 표절 및 위조 • 중복게재(자기표절) 등 실적 부풀리기	기관 자체징계 + 국가R&D제재조치 (참여제한, 연구비 환수)
③ 연구비 부정사용	• 외유성 국제 학술대회 출장 • 출장경비 과다집행 등	국가R&D제재조치 (참여제한, 연구비 환수)

□ **부실학회 관련 조치 및 점검단 점검 일정**

	① 직무윤리 위반	② 연구부정	③ 연구비 부정사용	점검단
	조사대상자 선별 (기관별 특별위원회)			
~11.9	직무윤리 위반자 조사·검증 직무윤리위반자 징계 통보(징계위)	연구부정 조사·검증 (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)	연구비 부정사용 조사·검증 (감사실)	
11.9	조사·검증 및 징계결과 보고(▲)	조사·검증결과 보고(■)		점검▲
		징계여부 결정 및 통보(징계위)	정밀정산 (연구재단)	점검■ (~11.23)
~12.20	자체징계 완료 (이의신청기간 30일 포함)			
12.20	최종조치결과 보고(★)			
~12.28				점검★
~12.31		국가R&D제재심의 (연구재단)		

붙임2 연구윤리 점검단 개요

1. 운영목적

-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(출연(연), 4개 과기원 등) 조치내용을 과기정통부가
즉각적으로 점검하여 공정성·투명성 및 신속한 처리 확보

2. 역할 및 기능

- ① 징계 등 처분기준에 대해 기관 간 처분수위 형평성 점검 및 조정
- ②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

< 점검내용 >

- 특별위 구성 및 기관별 조치계획(조치일정, 절차, 기준 등)의 적정성
 - 직무윤리 위반, 연구부정, 연구비 부정 조사·판정 결과의 적정성
 - 직무윤리 위반, 연구부정* 관련 징계 등 처분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등
- * 연구비부정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밀정산 후 제제조치 하므로 점검대상에서 제외

- ③ 기관별 점검결과에 따른 재조사 필요성 등 심의

3. 점검단 구성

-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연구개발정책실장(단장), 연구개발정책과장,
연구기관지원팀장, 미래인재양성과장
- (한국연구재단) 정책연구혁신센터장, 감사실장
- (국가과학기술연구회) 평가사업부장
- (외부 전문가) 법률전문가 포함 7인